

<서식1>

##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정책연구과제명		성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 법정형 구분 및 무고죄 법정형 강화의 필요성 (외국 사례 및 국내 실무례 중심)		
신청부서		대검찰청 형사1과	담당공무원	박성국
연구방식		1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위탁형 용역    2.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연구형 용역    3.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문형 용역		
연구기간		2022. 6.       ~       2022. 12.       (6개월 )		
예산 규모	항목	1. <input type="checkbox"/> 포괄 연구개발비    2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별 연구개발비		
	예산금액	금 이천오백만 원 정(₩25,000,000)		
계약방법		수의계약		
연구의 필요성 (긴급한 사유)		○ 성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 법정형 구분 및 무고죄 법정형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외국 사례 및 국내 실무례 등 연구 필요		
연구의 중복 검토결과		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① 중복검토 방법: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관련 논문 및 연구자료 검색 ② 중복 여부: <input type="checkbox"/> 있다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다		
연구내용		<p>○ 무고죄 처벌 강화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허위 신고 및 고소는 상대방을 피의자로 만들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하는 한편, 국가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피해 심각</li> <li>- 살인·성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한 허위 신고 및 고소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 방지를 위한 무고죄 엄벌 필요</li> </ul> <p>○ 형사정책적 검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고죄 법정형 강화, 성범죄 등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에 대한 형사정책적 검토 필요</li> <li>- 특히 성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를 별도로 신설할 경우 예상되는 범죄 예방 효과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 필요</li> </ul> <p>○ 무고죄 관련 입법례 및 각국 실태 분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고죄 법정형 상향 및 성범죄 등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관련 입법례 및 각국 실태 등 분석</li> </ul>		
연구결과 활용방안		○ 무고죄 관련 수사 및 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		